

행정(공공관리)의 관점에서 살펴본 문재인 정부 국정과제

정 홍 상*

- I. 서론
- II. 공공관리(public administration)로서의 행정
- III. 문재인 정부 국정과제
- IV. 결론

〈요약〉

국정과제의 국정은 국가관리이고 국가관리는 행정 즉, 공공관리인데 국정과제를 행정(공공관리)의 관점에서 살펴본 연구가 없다. 본 연구는 행정(공공관리)의 관점에서 국정과제를 분석한 연구이다. 분석을 위해서는 분석 틀이 필요하다. 본 연구는 행정 즉, 공공관리의 '공공(公共)'을 '공익'의 관점에서 이른바 '공동체 이익(public interest)'과 '일반 이익(public good)'으로 대별하고 공공관리의 관리방식을 '법치(法治)', '통치(統治)', '협치(協治)'로 구분한 분석 틀을 설정하고, 분석 틀에 근거하여 지금의 이재명 정부와 그 맥을 같이 한다고 보여지는 문재인 정부의 국정과제를 분석하였다. 분석 결과는 문재인 정부는 '일반 이익' 창출보다는 '공동체 이익' 창출에 초점을 두고 '법치'보다는 '통치'와 '협치'를 중시한 정부로서 '통치'와 '협치'를 통한 '공동체 이익' 창출에 보다 중점을 둔 정부였음을 보여주고 있다.

[주제어: 공동체 이익, 일반 이익, 법치, 통치, 협치]

I. 서론

정권이 바뀌면 정권을 잡은 새 정부는 집권기간 동안 자신이 하고자 하는 일을 국정과제라는 이름으로 발표한다. 새 정부의 정부가 하는 일은 행정(public administration) 즉, 공공관리이다. 정권을 잡은 특징의 정부가 하고자 하는 일이 무엇인지를 알기 위해서는 따라서 그 정부의 국정과제를 행정 즉, 공공관리의 관점에서 살펴볼 필요가 있다.

* 경북대학교 행정학부 교수(jhs@knu.ac.kr)

역대 정부의 특징을 살펴본 연구는 다수 있다.(예: 김미경, 2020; 김판석·홍길표, 2011; 남궁근, 2021; 남재걸·김재일, 2022; 윤태범, 2024; 은재호, 2006; 황혜신, 2013). 그런데 역대 정부의 국정과제를 연구 대상으로 한 연구는 이상하리만치 별로 없고(예와:염재호·하민철·길종백, 2008; 이인원·이영미, 2019), 더구나 국정과제를 행정 즉, 공공관리의 관점에서 살펴본 연구는 본 연구자가 찾아본 바로는 없다.¹⁾

지난 6월 출범한 이재명 정부는 아직 국정과제를 발표하지 않은 상태이다.²⁾ 본 연구는 이재명 정부와 그 결을 같이 한다고 여겨지는 문재인 정부의 국정과제를 행정 즉, 공공관리의 관점에서 살펴본 연구이다.

논의의 진행은 다음과 같다. 우선 행정 즉, 공공관리는 어떻게 이해되어 질 수 있는지 공공관리로서의 행정의 개념을 설명한다. 이후 행정(공공관리)의 관점에서 국정과제의 특징을 분석할 수 있는 분석 틀을 설정하고 이에 근거하여 문재인 정부 국정과제를 분석한 분석 결과를 제시한다. 분석 결과를 제시 함에 있어 분석기준과 국정과제 내용을 현시(顯示)하여 본 연구자가 문재인 정부의 국정과제를 어떻게 분석하였는지를 이 글을 읽는 독자들과 함께 공유한다. 결론에서는 분석 결과를 요약하고 향후 연구과제를 제시한다.

II. 공공관리(public administration)로서의 행정

행정은 “public administration”이다. “public administration”은 ‘publicness(공공성)’와 ‘administration(관리)’의 합성어이다. 행정 즉, “public administration”이 무엇인지는 “public administration”에서의 ‘publicness(공공성)’가 무엇이고 “public administration”에서의 ‘administration(관리)’이 무엇을 의미하는지에 대한 고찰을 통해 그 의미 파악이

1) 국정과제를 연구 대상으로 한 연구로는 염재호·하민철·길종백(2008)의 연구와 이인원·이영미(2019)의 연구가 있다. 염재호·하민철·길종백 (2008)은 기술혁신의 논의에 바탕하여 이른바 정부혁신 분석 틀을 설정하고 이에 근거하여 노무현 정부의 국정과제를 정부혁신의 관점에서 평가하고 있다. 이인원·이영미(2019)는 문재인 정부의 국정과제에 대한 언어네트워크 분석을 통해 문재인 정부의 가치지향과 정책 방향을 분석하고 있다. 이들 연구들이 정부의 국정과제 특징 분석에 있어 의미 있는 연구 결과들을 제시하고는 있으나 행정 즉, 공공관리의 관점에서 국정과제의 특징을 살펴보지는 않고 있다.

2) 이재명 정부는 2025년 8월 123개의 국정과제를 발표하였다. 본 논문은 이재명 정부의 국정과제가 발표되기 전 작성되었다.

가능하다.

1. 행정(public administration)에 있어서의 공공성(publicness)

‘publicness(공공성)’의 ‘the public’은 ‘집합체(集合體)’로서의 ‘the public’과 ‘군집체(群集體)’로서의 ‘the public’ 중 어느 하나를 지칭하는 개념으로 사용되어진다. ‘집합체(集合體)’는 부분과 부분이 연결된 ‘결합체(부분-연결-부분)’이다. ‘군집체(群集體)’는 부분과 부분이 모인 ‘모임체(부분+부분)’이다. ‘집합체(集合體)’는 ‘부분+부분+연결’이다. 전체로서의 ‘집합체(集合體)’는 부분으로 치환할 수 없는 ‘연결’이 있다. ‘군집체(群集體)’는 ‘부분+부분’이다. 전체로서의 ‘군집체(群集體)’는 부분으로 치환할 수 있는 부분의 ‘합(合)’이다.

부분과 부분 사이에 ‘연결’이 있다는 것은 연결되어있는 부분과 부분 간에 ‘사이’가 있다는 것이다. ‘사이’는 ‘간격’이고 ‘관계’이다. ‘간격’은 ‘간격’을 이루고 있는 대상 간의 서로 ‘다름’을 전제한다. 따라서 일정한 ‘사이’가 형성되어 있다는 것은 서로 ‘다른’ 대상 간에 일정한 ‘관계’가 형성되어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런 맥락에서 ‘집합체(集合體)’로서의 ‘the public’은 서로 ‘다른’ ‘public a’와 ‘public b’가 일정한 ‘사이’ 즉, ‘관계’를 형성하여 전체를 이루고 있는 ‘공동체’로 이해할 수 있다. ‘집합체(集合體)’ 즉, ‘공동체’로서의 ‘the public’의 ‘public a’와 ‘public b’는 서로 구분되는 특정의 집단/계층이다. 여기서 사람은 특정의 집단/계층을 떠난 개별 ‘개인(個人)’으로 의제 되지 않는다. 사람은 특정의 집단/계층에 속한 특정 집단/계층의 ‘구성원(構成員)’으로 의제 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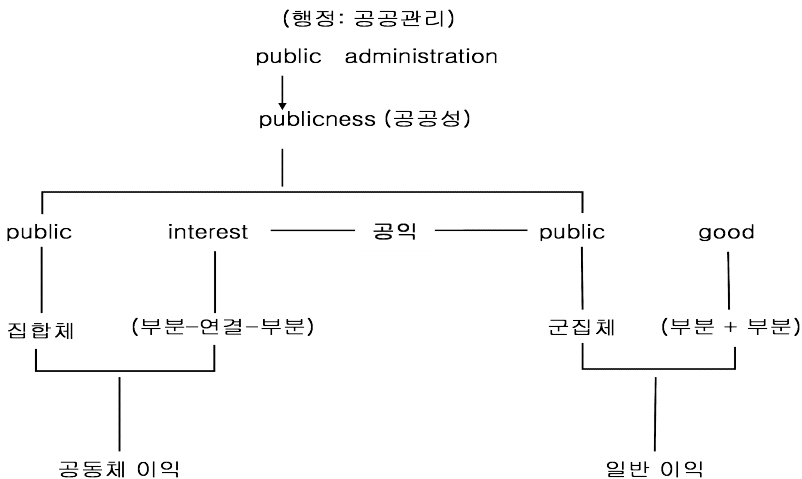
전체가 부분의 ‘합(合)’이라는 것은 전체를 이루고 있는 부분과 부분 간에 ‘사이’ 즉, ‘관계’를 상정하지 않는다는 말이고, 부분과 부분 간에 ‘사이’ 즉, ‘관계’를 상정하지 않는다는 말은 곧, ‘합(合)’을 이루고 있는 부분과 부분 간에 ‘간격’ 즉, ‘다름’을 전제하지 않는다는 말이다. 한마디로 이야기해서 ‘합(合)’을 이루고 있는 각 부분은 ‘다름’이 아닌 ‘같음’의 ‘일반(一般)’이다. 이런 맥락에서 ‘군집체(群集體)’로서의 ‘the public’은 개별 사람들의 총합인 ‘일반 대중’으로 이해할 수 있다. 여기서 사람은 서로 구분되는 특정의 집단/계층에 속한 특정 집단/계층의 ‘구성원(構成員)’으로 의제 되지 않는다. 일반 대중에서의 사람은 특정의 집단/계층을 떠난 같은 인간으로서의 개별 ‘개인(個人)’으로 의제 된다.

‘공공성(公共性)’의 ‘공공(公共)’ 즉, 공동체 또는 일반대중의 이익을 ‘공익’이라고

한다. 공동체로서의 ‘공공(公共)’이 추구하는 ‘공익’은 공동체를 구성하고 있는 ‘public a’와 ‘public b’ ‘사이(-inter: between/among)’에 형성된 ‘관계’의 ‘바람직성’과 관련되어 있는 ‘public interest’(Pesch, 2008), 이름하여 ‘공동체 이익’이다. 일반대중으로서의 ‘공공(公共)’이 추구하는 ‘공익’은 일반 개인의 ‘공리(功利)’ 즉, ‘효용(效用)의 극대화’(고봉진, 2003)와 관련되어있는 ‘public good’(Pesch, 2008), 이름하여 ‘일반 이익’으로 개념화 되어질 수 있다.³⁾

공공성(公共性)의 ‘성(性)’은 ‘정도’이다. 행정 즉, 공공관리(public administration)와 관련하여 ‘공공성(公共性)’은 ‘관리’를 통한 공동체 또는 일반 대중이 추구하는 ‘공익’ 즉, ‘공동체 이익(public interest)’ 또는 ‘일반 이익(public good)’의 (구현) 정도로 이해할 수 있다.

〈그림 1〉 행정(public administration)에 있어서의 공공성(publicness)



3) Pesch(2008)는 공공관리에 있어서의 ‘공공성(publicness)’을 전체주의(wholism)에 기반한 ‘public interest’와 개체주의(individualism)에 기반한 ‘public goods(공공재)’로 구분하고 있다. 본 연구는 ‘공공성(publicness)’에 대한 Pesch(2008)의 논의를 참조하여 공익을 전체주의(wholism)에 기반한 공익과 개체주의(individualism)에 기반한 공익으로 구분하고 전체주의(wholism)에 기반한 공익을 ‘공동체 이익(public interest)’으로, 개체주의(individualism)에 기반한 공익을 ‘일반 이익(public good)’으로 이름한다. 한편 고봉진(2023)과 임도빈(2000)은 ‘public utility’를 ‘공익’으로 표현하는데 고봉진(2023)과 임도빈(2000)의 ‘공익(public utility)’은 본 연구의 ‘일반 이익(public good)’과 일맥상통한다. 관련 논의는 고봉진(2023), 임도빈(2000), Pesch(2008)를 참조하기 바란다.

2. 행정(public administration)에 있어서의 관리(administration)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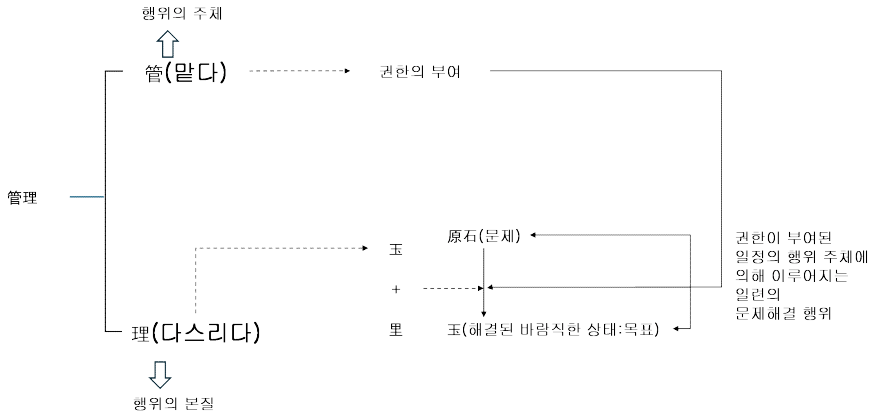
‘관리(管理)’는 ‘관(官)’과 ‘리(理)’의 합성어이다. ‘관리(管理)’의 ‘관(官)’은 ‘말다’이다. ‘관리(管理)’의 ‘리(理)’는 ‘다스리다’이다. ‘관리(管理)’는 ‘말아서 다스림’이다. 누가 다스리는가? 말은 이가 다스린다. 그런데 아무나 말아서 다스리지는 않는다. 다스림의 권한이 부여된 이가 말아서 다스린다. ‘관리(管理)’의 ‘관(官)’은 다스림의 권한이 부여된 일정의 ‘행위 주체’를 이야기한다.

말은 이가 무엇을 하나? 다스린다. ‘관리(管理)’의 ‘리(理)’는 ‘행위의 본질’을 이야기한다. 다스림을 뜻하는 ‘리(理)’는 왕(王)이 아닌 뜻을 나타내는 구슬옥(玉)과 음을 나타내는 리(里)가 합하여진 글자이다(<https://hanja.dict.naver.com/>). 옥(玉)은 옥(玉) 이전의 돌 즉, 원석(原石)이 있다. 옥(玉)은 옥(玉) 이전의 돌 즉, 원석(原石)을 갈고 닦아 만들어진 것이다. 원석(原石)은 갈고 닦아야 하는 대상, 말하자면 해결해야 할 문제이다. 옥(玉)은 갈고 닦아 완성된 상태, 이를테면 문제가 해결된 바람직한 상태이다. ‘다스림’이란 이런 측면에서 ‘사람의 다스림이 아니라 문제의 다스림’ (이명석, 2002) 즉, ‘문제해결 행위’로 이해할 수 있다.

‘관리(管理)’란 무엇인가? ‘관리(管理)’는 권한이 부여되어진 일정의 행위주체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해결해야 할 문제에 대한 문제인지, 그 문제가 해결된 바람직한 상태 즉, 목표의 상정, 상정된 문제해결 상태에 도달하기 위한 대안의 설정 및 이의 현실화 등으로 이루어진 일련의 문제해결 행위이다.

4) “행정(public administration)에 있어서의 관리(administration)”에 대한 이하의 설명은 본 연구자가 논문 “3C 조직관리 효과성 모델(2011)”에서 논한 바 중 일부에 바탕 하여 필요 부분을 그대로 옮기거나 보완하고 여기에 더하여 본 연구의 주제에 맞게 새로운 부분을 추가한 것이다.

〈그림 2〉 행정(public administration)에 있어서의 관리(administration)



자료: 정홍상(2011: 230)의 재구성

‘관리(管理)’에서 중요한 것은 ‘누가(관:官)’ ‘어떻게(리:理)’ 문제를 다스려야 하는가?이다. 이와 관련하여 전통 행정론(PA)과 신공공관리론(NPM), 그리고 뉴거버넌스(New Governance)는 각기 다른 답을 제시한다.

〈표 1〉 행정(public administration)의 관리(administration) 패러다임

	관(官): 누가?	리(理): 어떻게?	관리(管理): 문제해결방식
전통 행정론(PA)	정부(거버먼트)	합법/통제/규율	법치(法治)
신공공관리론(NPM)	정부(거버먼트)	전문/자율/효율	통치(統治)
뉴거버넌스론(New Governance)	거버넌스(정부와 정부간, 정부와 국민간)	연계/협력/소통	협치(協治)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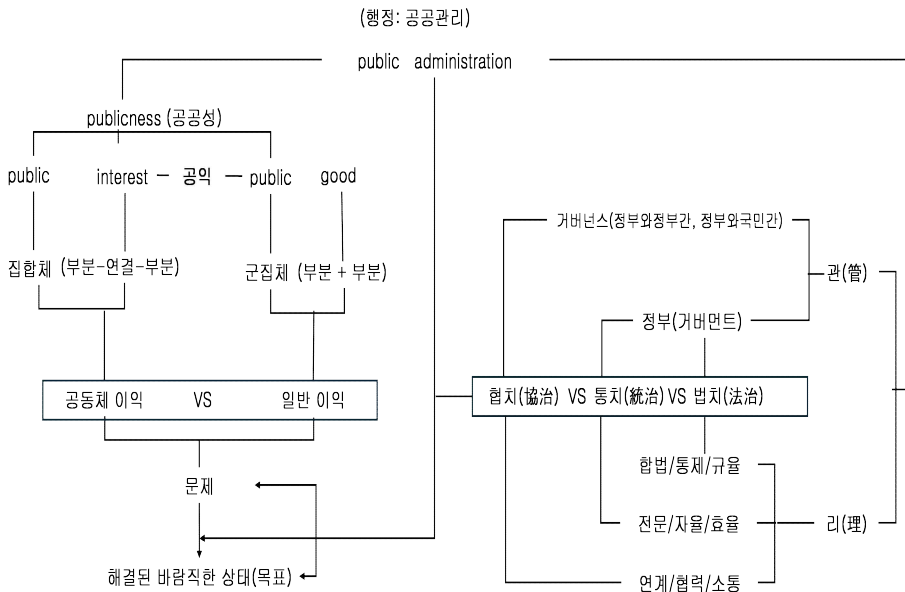
전통 행정론(PA)이 이야기하는 공공 관리의 관리주체는 ‘정부(거버먼트)’이고 ‘정부(거버먼트)’는 관리행위를 함에 있어 ‘합법/통제/규율’을 추구한다(유민봉, 2016; 정정길, 2011). 전통 행정론이 상정하는 올바른 관리는 ‘법치(法治)’이다. 신공공관리론(NPM)이 상정하는 공공관리의 주요 관리주체는 ‘정부(거버먼트)’이고 ‘정부(거버먼트)’는 관리행위를 함에 있어 ‘전문/자율/효율’을 추구한다(유민봉, 2016; 정정길, 2011). 신공공관리론(NPM)이 상정하는 올바른 관리는 ‘통치(統治)’이다. 뉴거버넌스(New Governance)가 상정하는 공공관리의 관리주체는 정부와 정부 간, 정부와 국민(시민) 간 ‘거버넌스’이고 관리행위를 함에 있어 ‘거버넌스’는 ‘연계/협력/소통’을 중시한다

(유민봉, 2016; 정정길, 2011). 뉴거버넌스(New Governance)가 상정하는 올바른 관리는 ‘협치(協治)’이다

3. 공공관리(public administration)로서의 행정

‘공동체 이익(public interest)’ 과 ‘일반 이익(public good)’으로 대별 되는 ‘공익’이 제대로 창출되지 않는 것이 해결해야 할 ‘공공문제’이다. 행정의 기존 이론을 참조할 때, 공공문제 해결 기제로 ‘합법/통제/규율’을 내재화한 ‘정부’에 의한 ‘법치(法治)’, ‘전문/자율/효율’을 배태(胚胎)한 ‘정부’에 의한 ‘통치(統治)’, ‘연계/협력/소통’을 중시하는 ‘정부와 정부 간, 정부와 국민(시민) 간 거버넌스’ 즉, ‘협치(協治)’가 상정될 수 있다.

〈그림 3〉 공공관리(public administration)로서의 행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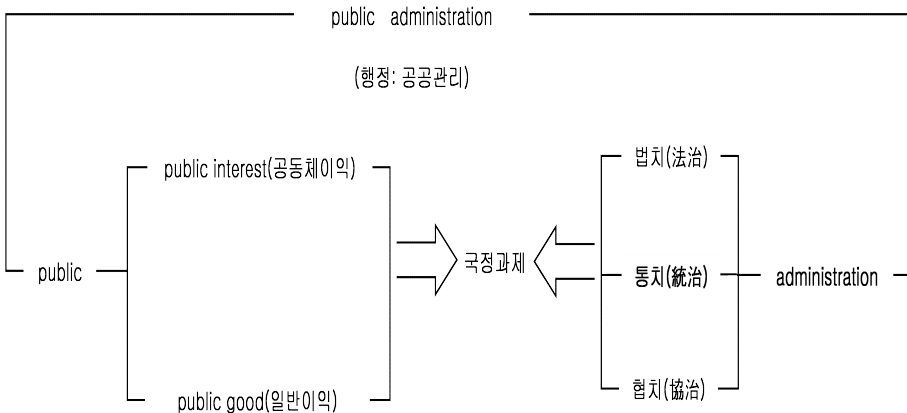
본 연구는 이런 측면에서 공공관리(public administration) 즉, 행정을 ‘공동체 이익(public interest)’과 ‘일반 이익(public good)’으로 대별 되는 ‘공익’의 창출과 관련되어 제기되는 각종의 ‘공공문제’를 ‘법치(法治)’, ‘통치(統治)’, ‘협치(協治)’ 등의 방식을 통해 해결하고자 하는 일련의 ‘공공문제 해결행위’로 개념화한다.

Ⅲ. 문재인 정부 국정과제

1. 분석 틀 및 분석기준

공공관리로서의 행정에 대한 앞선 논의에 바탕하여 본 연구는 행정 즉, 공공관리의 ‘공공(公共)’을 ‘공익’의 관점에서 ‘공동체 이익(public interest)’과 ‘일반 이익(public good)’으로 대별하고 공공관리의 관리방식을 ‘법치(法治)’, ‘통치(統治)’, ‘협치(協治)’로 구분한 그림<4>와 같은 국정과제 분석 틀을 설정하였다.

〈그림 4〉 국정과제 분석 틀



분석 대상은 문재인 정부 100대 국정과제였고 분석 자료는 국정기획자문위원회가 발간한 “문재인 정부 국정운영 5개년 계획(2017)”이었다. “문재인 정부 국정운영 5개년 계획(2017)”에는 문재인 정부 100대 국정과제가 과제 목표, 주요 내용, 기대 효과 순으로 기술되어 있는데 기술된 관련 내용을 분석하였다. 국정과제 분석 시 적용한 분석 틀 적용기준은 다음과 같다.

첫째, 분석자료에 기술되어 있는 과제 목표, 주요 내용, 기대 효과 등에 공익 관련 내용이 포함되어 있지 않을 경우, 해당 과제는 공익창출을 과제의 1차적 목적으로 상정한 것은 아닌 것으로 의제 하여 ‘해당 없음’으로 분석하였다.

둘째, 과제 목표, 주요 내용, 기대 효과 등에 집단·계층 간 관계의 형평성 제고 또는 민족, 국가 단위 포함 특정 집단·계층의 이익 제고 내용을 포함하고 있는 과제는

‘공동체 이익’ 관련 과제로 분석하였고, 특정 집단·계층의 구성원이 아닌 불특정 다수의 공통이익 또는 개인의 사익 보호 등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는 과제는 ‘일반 이익’ 관련 과제로 분석하였다. ‘공동체 이익’, ‘일반 이익’ 모두에 관련된 내용이 있는 경우 그 과제는 ‘공동체 이익’, ‘일반 이익’ 모두에 관련된 과제로 분석하였다.

셋째, 과제 목표, 주요 내용, 기대 효과 등에 ‘법치’, ‘통치’, ‘협치’ 등으로 대별 되는 관리방식과 관련된 내용이 없으면 ‘해당 없음’으로 분석하였다. ‘법치’는 합법/통제/규율을 지향하고, ‘통치’는 전문/자율/효율을, ‘협치’는 연계/협력/소통을 지향한다. 과제 목표, 주요 내용, 기대 효과 등에 상기 적시의 지향점과 관련된 내용이 없을 경우 그 과제는 해당 관리방식을 내재화 한 국정과제가 아니라고 분석하였다. ‘법치’, ‘통치’, ‘협치’ 중 어느 둘, 내지 전부와 관련된 내용이 있는 경우 해당 과제는 관련 관리방식 모두를 내재한 국정과제로 분석하였다.

넷째, 본 연구는 공공 관리의 주체인 정부의 범위를 폭넓게 해석하여 중앙정부와 지방정부뿐 아니라 국회, 준정부기관, 공공기관도 정부의 범주에 포함 시켜 파악하였다. 다만 본 연구가 상정한 정부는 우리나라 정부이다. 북한 정부와 다른 나라 정부는 정부의 범주에 포함시키지 않았다. 따라서 특정의 국정과제가 우리나라 정부와 북한 정부, 또는 우리나라 정부와 다른 나라 정부 간 연계/협력/소통을 강조하고 있다고 해서 그 과제를 ‘협치’와 관련된 과제로 평가하지는 않았다.

다섯째, 본 연구는 정부와 함께 국민(시민) 또한 폭넓게 해석하여 시민으로서의 개별 국민 뿐 아니라 시민단체, 기업 등을 포함한 일체의 민간단체도 국민(시민)의 범주에 포함시켜 파악하였다.

2. 문재인 정부 국정과제

1) 문재인 정부 국정과제 체계

문재인 정부 국정과제는 국가비전-5대 국정목표-20대 국정전략-100대 국정과제로 구성되어 있다. 국정비전 및 국정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실천 전략으로 20대 국정전략을 상정하고, 국정전략별로 100대 국정과제를 추진해야 할 핵심 정책으로 설정하고 있다(국정기획자문위원회, 2017)

〈그림 5〉 문재인정부 국정과제 체계

국가비전	국민의 나라 정의로운 대한민국				
5대 국정목표	국민이 주인인 정부	더불어 잘사는 경제	내 삶을 책임지는 국가	고르게 발전하는 지역	평화와 번영의 한반도
20대 국정전략	1. 국민주권의 촛불 민주주의 실현 2. 소통으로 통합하는 광화문 대통령 3. 투명하고 유능한 정부 4. 권력기관 의 민주적 개혁	1. 소득주도 성장을 위한 일자리 경제 2. 활력이 넘치는 공정경제 3. 서민과 중산층을 위한 민생경제 4. 과학기술 발전이 선도하는 4차 산업혁명 5. 중소벤처 가 주도하는 창업과 혁신성장	1. 모두가 누리는 포용적 복지국가 2. 국가가 책임지는 보육과 교육 3. 국민 안전과 생명을 지키는 안심사회 4. 노동존중 성평등을 포함한 차별없는 공정사회 5. 자유와 창의가 넘치는 문화국가	1. 풀뿌리 민주주의 를 실현하는 자치분권 2. 골고루 잘사는 균형발전 3. 사람이 돌아오는 농산어촌	1. 강한 안보와 책임국방 2. 남북 간 화해협력 과 한반도 비핵화 3. 국제협력을 주도하는 당당한 외교
100대 국정과제	15대 과제	26개 과제	32개 과제	11개 과제	16개 과제

자료: 「국정기획자문위원회」(2017: 15)의 재구성

2) 문재인 정부 국정과제 1 : 국민이 주인인 정부

문재인 정부 5대 국정 목표 중 첫 번째 국정 목표인 “국민이 주인인 정부”는 4개의 국정전략 즉, ‘국민주권의 촛불 민주주의 실현’, ‘소통으로 통합하는 광화문 대통령’, ‘투명하고 유능한 정부’, ‘권력기관의 민주적 개혁’으로 구성되어 있다.

국정전략 ‘국민주권의 촛불 민주주의 실현’은 4개의 국정과제로 구성되어 있다. 공익과 관련하여서는 ‘공동체 이익’(예: 광주민주화 피해자 및 유족, 해직언론인 권익 보호 등) 과 ‘일반 이익’(예: 인터넷 정보게재자 표현 자유), 그리고 관리와 관련하여서는

‘법치’(예: 부패범죄 처벌강화/범죄수익 환수 기능 강화 등)와 ‘협치’(예: 문화행정 민관 협의체 설치·운영, 민·관 협력형 부패방지 체계 확립 등) 관련 국정과제로 구성되어 있다.

〈표 2〉 국민주권의 촛불민주주의 실현 관련 국정과제⁵⁾

국민주권의 촛불 민주주의 실현	공공관리				
	공익		관리		
	공동체	일반	법치	통치	협치
1. 적폐의 철저하고 완전한 청산					
- 부정축재 재산 환수/검찰의 범죄수익 환수 기능 강화/부정축재 재산 환수 관련 법률 제정 지원 - 문화행정 혁신을 주도하는 민관협의체 설치 운영			○		○
2. 반부패 개혁으로 청렴한국 실현					
- 중대 부패범죄 처벌강화 - 민관협력형 부패방지체계 확립/시민공익위원회설치			○		○
3. 국민 눈높이에 맞는 과거사 문제해결					
- 5.18 광주민주화 운동, 제주 4.3 등의 피해자 및 유족 등에 대한 과거사 청산으로 사회통합 지원 - 피해자, 유족 등이 참여하는 과거사 통합재단 설립	○				○
4. 표현의 자유와 언론의 독립성 보장					
- 공영방송 지배구조 개선 및 보도·제작·편성의 자유 보장 - 인터넷 표현의 자유 보장 - 해직언론인 복직·명예 회복 지원	○	○			

자료: 「국정기획자문위원회」(2017: 24-27)의 재구성

국정전략 ‘소통으로 통합하는 광화문 대통령’은 3개의 국정과제로 구성되어 있다. 공익과 관련하여서는 ‘공동체 이익’(예: 국가폭력 피해자 지원, 장애인·노령자 투표 편의 제공)과 ‘일반 이익’(예: 개인 정보 보호), 그리고 관리와 관련하여서는 ‘법치’(예: 고위공직자 검증기준 마련 적용, 무분별 개인정보 이용 제재 강화)와 ‘협치’(예: 대통령 포함 주요 인사 일정 국민과 공유, 국민 참정권 확대 등) 관련 국정과제로 구성되어 있다.

5) 〈표 2〉를 포함하여 이하 〈표 3〉부터 〈표 21〉 까지에서 적시하고 있는 표 안의 국정과제에 대한 기술은 국정기획자문위원회가 발간한 “문재인 정부 국정운영 5개년 계획(2017)”의 관련 내용을 발췌하여 이를 재구성한 것이다.

〈표 3〉 소통으로 통합하는 광화문 대통령 관련 국정과제

소통으로 통합하는 광화문 대통령	공공관리				
	공익		관리		
	공동체	일반	법치	통치	협치
5. 365일 국민과 소통하는 광화문 대통령			○		○
- 대통령 포함 주요 인사 일정을 국민과 공유 - 고위공직자 검증기준 마련 및 이의 적용					
6. 국민 인권을 우선시하는 민주주의 회복과 강화	○	○	○		○
- 국가폭력 불법사찰 근절 및 피해자 지원 - 무분별한 개인정보 이용에 대한 제재 강화 - 시민사회발전위원회 설치등 시민사회 성장기반 마련					
7. 국민주권적 개혁 및 국민참여 정치개혁	○				○
- 국민주권적 개혁 추진/국민 참정권·정치참여 확대 - 국회의원 권역별 비례대표제 도입/장애인·노령자 투표 편의 제공 강화					

자료: 「국정기획자문위원회」(2017: 29-31)의 재구성

국정전략 ‘투명하고 유능한 정부’는 5개의 국정과제로 구성되어 있다. 공익과 관련하여서는 ‘공동체 이익’(예: 장애인, 지역인재 채용확대, 공공기관 비정규직 정규직 전환 등) 과 ‘일반 이익’(예: 해외 체류 국민 안전 강화), 관리와 관련하여서는 ‘법치’(예: 재산공개 심사강화, 공공기관 감사 강화 등), ‘통치’(예: 지능형 정부, 전문직 공무원 제도 확대 등), 그리고 ‘협치’(예: 민관협업 사회문제 해결, 국민참여 마당 신설 등) 관련 국정과제로 구성되어 있다.

〈표 4〉 투명하고 유능한 정부 관련 국정과제

투명하고 유능한 정부	공공관리				
	공익		관리		
	공동체	일반	법치	통치	협치
8. 열린 혁신정부, 서비스하는 행정				○	○
- 국민이 정책입안 단계부터 참여, 민관협업을 통해 사회문제 해결 - 최신기술 기반 지능형 정부, 데이터에 근거한 과학적 행정 구현					
9. 적재적소, 공정한 인사로 신뢰받는 공직사회 구현	○		○	○	
- 고위직 임용기준 강화/ 재산공개·심사강화, 퇴직자 접촉 등 행위 제한 강화 - 장애인, 지역인재 채용 확대 등 균형 정부인사시스템 운영 - 경력개방형직위/전문직 공무원제도 적용 확대					

10. 해외체류 국민 보호강화 및 재외동포 지원확대					
- 해외체류 우리 국민 안전 강화 - 재외동포 한민족 정체성 함양 및 역량 강화	○	○			
11. 국가를 위한 헌신을 잊지 않고 보답하는 나라					
- 국가유공자 등에 대한 예우 및 지원강화 - 제대 군인 등 지원 강화	○				
12. 사회적 가치실현을 선도하는 공공기관					
- 공공기관 비정규직 정규직 전환 단계적 확대 - 공공기관 정보공개 확대/국민참여 마당 신설 - 공공기관 감사 강화 및 노동이사제 도입	○		○		○

자료: 「국정기획자문위원회」(2017: 33-37)의 재구성

국정전략 ‘권력기관의 민주적 개혁’은 3개의 국정과제로 구성되어 있다. 공익과 관련하여서는 ‘공동체 이익’(예: 사회적 약자보호, 중산·서민층에 대한 세제지원)과 ‘일반 이익’(예: 주민밀착 치안, 납세자 권익 보호), 그리고 관리와 관련하여서는 ‘법치’(예: 불공정거래 감사시스템 구축, 탈루소득 과세 강화 등)와 ‘통치’(예: 과학수사역량 강화 등) 관련 국정과제로 구성되어 있다.

〈표 5〉 권력기관의 민주적 개혁 관련 국정과제

권력기관의 민주적 개혁	공공관리				
	공익		관리		
	공동체	일반	법치	통치	협치
13. 국민의, 국민을 위한 권력기관 개혁					
- 검사의 이의제기권 행사 절차 구체화 - 검사의 외부기관 근무축소, 검사징계 실효성 확보 - 광역단위 자치경찰, 경찰진압장비 사용요건 법규화 - 공공부문 불공정거래 감사시스템 구축			○		
14. 민생치안 역량 강화 및 사회적 약자 보호					
- 주민밀착 치안 강화 - 사회적 약자 보호 치안정책 추진 - 치안 인프라 확충/과학수사역량 강화	○	○		○	
15. 과세형평제고 및 납세자 친화적 세무 행정 구축					
- 탈루소득 과세 강화 등 과세 형평성 제고 - 중산·서민층에 대한 세제지원 - 세무조사 남용 방지 포함 납세자중심 세정 정립	○	○	○		

자료: 「국정기획자문위원회」(2017: 39-41)의 재구성

3) 문재인 정부 국정과제 II: 더불어 잘 사는 경제

문재인 정부 5대 국정 목표 중 두 번째 국정 목표인 “더불어 잘사는 경제”는 5개의 국정전략 즉, ‘소득 주도 성장을 위한 일자리 경제’, ‘활력이 넘치는 공정경제’, ‘서민과 중산층을 위한 민생경제’, ‘과학기술발전이 선도하는 4차 산업혁명’, ‘중소벤처가 주도하는 창업과 혁신성장’으로 구성되어 있다.

국정전략 ‘소득주도 성장을 위한 일자리 경제’는 7개의 국정과제로 구성되어 있다. 공익과 관련하여서는 ‘공동체 이익’(예: 저임금 근로자 처우개선, 취약계층 가계부채 부담경감 등)과 ‘일반 이익’(예: 전 국민 노동시장 적응력 제고, 금융 소비자 보호 등), 관리와 관련하여서는 ‘법치’(예: 금융관리·감독체계 마련)와 ‘통치’(예: 취업 상담 인력 전문성 제고, 전문직 공무원 제도 내실화), 그리고 ‘협치’(예: 사회적 대화를 통한 일자리 창출, 정책 실행제 확대) 관련 국정과제로 구성되어 있다.

〈표 6〉 소득주도 성장을 위한 일자리 경제 관련 국정과제

소득주도 성장을 위한 일자리 경제	공공관리				
	공익		관리		
	공동체	일반	법치	통치	협치
16. 국민의 눈높이에 맞는 좋은 일자리 창출	○	○			○
- 공공부문 일자리 창출 - 사회적 대화를 통한 지역·산업 맞춤형 일자리 창출					
17. 사회서비스 공공인프라 구축과 일자리 확충		○			
- 공공인프라 확충을 통해 사회서비스 일자리 창출 - 찾아가는 보건 복지서비스를 통해 주민의 복지 체 감도 향상					
18. 성별·연령별 맞춤형 일자리 지원강화	○				
- 청년고용의무제 확대/청년 구직 촉진 수당 도입 - 출산·육아 등 직장 내 차별 해소 및 경력단절 여성의 재취업 지원					
19. 실직과 은퇴에 대비하는 일자리 안전망 강화	○	○		○	
- 실업급여 보장성 강화/고용보험 가입대상 확대 - 4차산업 대비 직업능력 개발을 통한 전 국민 노동시장 적응력 제고 - 취업 상담 인력 전문성 제고 등을 통해 구직자가 만족하는 취업 지원 서비스 제공					
20. 좋은 일자리 창출을 위한 서비스 산업 혁신	○	○			
- 신성장·유망 서비스 육성을 통한 민간 일자리 창출 - 저임금서비스 구조 개선을 통한 저임금 근로자 처우개선					

21. 소득주도 성장을 위한 가계부채 위험 해소	○	○			
- 상환능력 중심 여신심사체계 도입으로 가계부채 증가 관리 - 취약계층 부담 경감, 금융 소비자 보호장치 도입					
22. 금융산업 구조 선진화		○	○	○	○
- 소비자 보호 중심 금융관리·감독체계 마련 및 지배구조 개선 - 정책 실명제 확대, 전문직 공무원 제도 내실화 등을 통한 금융 행정 인프라 선진화 추진					

자료: 「국정기획자문위원회」(2017: 43-49)의 재구성

국정전략 ‘활력이 넘치는 공정경제’는 5개의 국정과제로 구성되어 있다. 공익과 관련하여서는 ‘공동체 이익’(예: 갑·을문제 개선을 위한 을지로 위원회 설치·추진, 사회적 경제 활성화로 협력, 포용성장 촉진 등)과 ‘일반이익’(예: 소비자 피해구제 강화), 관리와 관련하여서는 ‘법치’(예: 불공정 갑질 처벌, 신속·엄정한 법집행으로 불공정 거래 행위 억제 등)와 ‘통치’(예: 법위반 조사권 일부를 광역지자체와 분담, 사회적 경제 통합추진체계 구축으로 정책지원 효율화),⁶⁾ 그리고 ‘협치’(예: 공정위·지자체 간 협업) 관련 국정과제로 구성되어 있다.

〈표 7〉 활력이 넘치는 공정경제 관련 국정과제

활력이 넘치는 공정경제	공공관리				
	공익		관리		
	공동체	일반	법치	통치	협치
23. 공정한 시장질서 확립	○		○		
- 갑·을문제 개선을 위한 을지로 위원회 설치·추진 - 불공정 갑질 처벌/피해구제 - 자본시장 교란 행위 처벌강화					
24. 재벌 총수 일가 전횡 방지 및 소유·지배구조 개선			○		
- 대기업 총수 일가의 편법적 지배력 강화 및 부당한 경영 승계 차단 - 총수 일가 사익편취 행위 및 부당내부 거래 근절과 금융계 열사 지배력 강화 방지 등 금산분리 원칙 준수					
25. 공정거래 감시 역량 및 소비자 피해구조 강화	○	○	○	○	○
- 신속·엄정한 법집행으로 불공정거래행위 억제 - 법위반 조사권 일부를 광역지자체와 분담 - 공정위·지자체 간 협업으로 소비자 피해구제 강화					

6) 본 연구가 상정하는 ‘통치’는 전문성에 기초하여 효율성을 추구하는 정부의 자율적 관리행위이다. ‘국정과제 25. 공정거래 감시 역량 및 소비자 피해구조 강화’와 관련한 법위반 조사권 일부의 광역지자체 분담은 조사의 전문성이 광역지자체에 있는 경우, 이의 권한이양을 이야기하는 것으로 본 연구는 이를 ‘통치’로 이해하였다.

26. 사회적 경제 활성화	○			○	
- 사회적 경제 활성화로 협력성장, 포용성장 촉진 - 사회적 경제 통합추진체계 구축으로 정책지원 효율화					
27. 더불어 발전하는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		○		
- 생계형 적합업종 지정 등을 통해 중소기업·소상공인보호 - 중소기업단체 불공정행위 신고센터 설치·운영 지원					

자료: 「국정기획자문위원회」(2017: 51-55)의 재구성

국정전략 ‘서민과 중산층을 위한 민생경제’는 5개의 국정과제로 구성되어 있다. 공익과 관련하여서는 ‘공동체 이익’(예: 서민·취약계층을 위한 금융지원 강화, 저소득층 통신비 경감 등)과 ‘일반 이익’(예: 국민의 재산형성 금융개발, 환경 등 규제혁신으로 국민 보호 등), 그리고 관리와 관련하여서는 ‘법치’(예: 규제개혁위원회 윤리규정 도입)와 ‘협치’(예: 규제개혁위원회 민간위원 구성 다양화/회의록 공개)⁷⁾ 관련 국정과제로 구성되어 있다.

〈표 8〉 서민과 중산층을 위한 민생경제 관련 국정과제

서민과 중산층을 위한 민생경제	공공관리				
	공익		관리		
	공동체	일반	법치	통치	협치
28. 소상공인·자영업자 역량 강화	○				
- 소상공인 지원체계 강화 - 지역상권 내몰림 방지 등을 통해 골목상권 보호					
29. 서민 재산형성 및 금융지원 강화	○	○			
- 국민의 재산형성·노후대비 지원 금융상품 개발 - 서민·취약계층을 위한 금융지원 강화					
30. 민생과 혁신을 위한 규제 재설계	○	○	○		○
- 중기·소상공인 부담을 낮추는 규제 재설계/생명·안전·환경 규제혁신으로 국민 보호 - 환경·소비자·여성 등 규제개혁위원회의 민간위원 구성 다양화/회의록 공개 및 위원 윤리규정 도입					
31. 교통·통신비 절감으로 국민 생활비 절감	○	○			
- 광역알뜰교통카드 도입, 광역버스 확충 등으로 교통비 및 출퇴근 시간 절감 - 저소득층 통신비 경감을 포함한 가계통신비 실효적 인하					
32. 국가기간교통망 공공성 강화 및 국토교통산업 경쟁력강화	○	○			
- 건설업을 양질의 일자리로 전환하고 화물종사가 근로여건 개선 - 교통의 공공성(벽지노선운영, 대중교통 낙후지역 해소 등) 강화 및 도로·철도 노후 인프라 개선					

자료: 「국정기획자문위원회」(2017: 57-61)의 재구성

7) ‘국정과제 30. 민생과 혁신을 위한 규제 재설계’의 규제개혁위원회 회의록 공개는 일반 국민(시민) 포함 이해관계자와의 소통이라는 측면에서 본 연구는 이를 ‘협치’로 이해하였다.

국정전략 ‘과학기술 발전이 선도하는 4차 산업혁명’은 6개의 국정과제로 구성되어 있다. 공익과 관련하여서는 ‘공동체 이익’(예: 청년·과학기술인 친화적 연구환경 조성, 에너지 소외계층 복지지원 확대)과 ‘일반 이익’(예: ICT 인프라 확충 등을 통한 민간부문 일자리 창출, 유턴기업 지원 등으로 고용 창출 등), 그리고 관리와 관련하여서는 ‘통치’(예: 과학기술 콘트롤 타워 강화 및 총괄·조정·효율성 제고)와 ‘협치’(예: 국민참여 기반 국민생활문제 해결 R&D 추진) 관련 국정과제로 구성되어 있다.

〈표 9〉 과학기술 발전이 선도하는 4차 산업혁명 관련 국정과제

과학기술 발전이 선도하는 4차 산업혁명	공공관리				
	공익		관리		
	공동체	일반	법치	통치	협치
33. 소프트웨어 강국, ICT 르네상스로 4차 산업혁명 선도기반 구축					
- ICT·소프트웨어 혁신과 산업간 융합촉진으로 새로운 성장동력 창출 및 경제성장 견인 - ICT 공공부문 및 인프라 투자 등을 통한 민간부문 일자리 창출		○			
34. 고부가가치 창출 미래형 신산업 발굴·육성					
- 제조경쟁력, ICT, 서비스 등의 융합을 통한 미래형 신산업 육성 - 신산업분야 핵심 원천기술 확보 및 시장선점		○			
35. 자율과 책임의 과학기술 혁신 생태계 조성					
- 과학기술 콘트롤타워 강화 및 총괄·조정 효율성 제고 - 정부 R&D 정보 제공·개방 확대 및 국민참여 기반 국민생활문제 해결 R&D 추진		○		○	○
36. 청년과학자와 기초연구 지원으로 과학기술 미래역량 확충					
- 연구자 주도 기초연구지원 예산확대 및 자율성 보장 - 청년·여성 과학기술인 친화적 연구 환경 조성	○	○			
37. 친환경 미래에너지 발굴·육성					
- 에너지 다소비구조를 친환경·고효율 구조로 전환 - 에너지 소외계층 복지지원 확대	○	○			
38. 주력산업 경쟁력 제고로 산업경제의 활력 회복					
- 주력산업의 산업 재편 및 스마트화·융복합화·서비스화를 통해 산업 전반의 경쟁력 제고 - 외국인 투자·유턴 기업 지원 등으로 신산업 및 고용창출 효과 제고		○			

자료: 「국정기획자문위원회」(2017: 63-68)의 재구성

국정전략 ‘중소벤처가 주도하는 창업과 혁신성장’은 3개의 국정과제로 구성되어

있다. 공익과 관련하여서는 ‘공동체 이익’(예: 중소기업 인건비 지원 등으로 기업·근로자 부담 완화, 성과공유 확산 등으로 대중소기업 임금격차 완화)과 ‘일반 이익’(예: 혁신 창업 활성화 등으로 일자리 창출, 중소기업 육성으로 일자리 창출 및 소득주도 성장 달성 등), 그리고 관리와 관련하여서는 ‘통치’(예: 중소기업부 신설로 중소기업 정책 일원화 및 지원사업 유사 중복 등 조정 기능 강화) 관련 국정과제로 구성되어 있다.

〈표 10〉 중소벤처가 주도하는 창업과 혁신성장 관련 국정과제

중소벤처가 주도하는 창업과 혁신성장	공공관리				
	공익		관리		
	공동체	일반	법치	통치	협치
39. 혁신을 응원하는 창업국가 조성					
- 투자 중심 창업 생태계조성/선진국 수준 벤처펀드 확대 - 혁신 창업 활성화/재도전 인프라 확충 등으로 양질의 일자리 창출		○			
40. 중소기업의 튼튼한 성장환경 구축					
- 중소기업 육성으로 일자리 창출과 소득 주도 성장달성 - 중소벤처기업부 신설로 중소기업정책 일원화 및 지원사업 유사중복 등 조정기능 강화		○		○	
41. 대·중소기업 임금격차 축소 등을 통한 중소기업 인력난 해소					
- 중소기업에 대한 인건비 지원등으로 기업·근로자 부담 완화 - 성과공유 확산 등으로 대중소기업 임금격차 완화	○				

자료: 「국정기획자문위원회」(2017: 70-72)의 재구성

4) 문재인 정부 국정과제 Ⅲ: 내 삶을 책임지는 국가

문재인 정부 5대 국정 목표 중 세 번째 국정 목표인 “내 삶을 책임지는 국가”는 5개의 국정전략 즉, ‘모두가 누리는 포용적 복지국가’, ‘국가가 책임지는 보육과 교육’, ‘국민 안전과 생명을 지키는 안심사회’, ‘노동존중, 성평등을 포함한 차별 없는 공정사회’, ‘자유와 창의를 넘치는 문화국가’로 구성되어 있다.

국정전략 ‘모두가 누리는 포용적 복지국가’는 6개의 국정과제로 구성되어 있다. 공익과 관련하여서는 ‘공동체 이익’(예: 장애인의 자립생활 환경조성, 주거취약계층 주거 지원 강화 등)과 ‘일반 이익’(예: 모든 국민이 기본적 삶을 누릴 수 있도록 사회보장 강화, 건강보험보장 강화로 의료비 부담 경감 등), 그리고 관리와 관련하여서는 ‘협치’(예: 기금투자 운용 의사결정 및 투자내역·자산내역 공시 강화) 관련 국정과제로 구성

되어 있다.

〈표 11〉 모두가 누리는 포용적 복지국가 관련 국정과제

모두가 누리는 포용적 복지국가	공공관리				
	공익		관리		
	공동체	일반	법치	통치	협치
42. 국민의 기본생활을 보장하는 맞춤형 사회보장					
- 모든 국민이 기본적 삶을 누릴 수 있도록 사회보장 강화 - 장애인의 자립생활 환경 조성	○	○			
43. 고령사회 대비, 건강하고 품위 있는 노후생활 보장					
- 적정수준의 공적연금을 통한 노후 소득 보장 강화 - 기금투자 운용 의사결정 및 투자내역·자산내역 공시강화		○			○
44.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및 예방 중심 건강관리 지원					
- 건강보험 보장 강화로 실질적 의료비 부담 경감 - 건강증진사업 확대로 계층·지역별 격차 완화와 건강수명 연장	○	○			
45. 의료공공성 확보 및 환자 중심 의료서비스 제공					
- 지역사회중심 의료체계 강화/지역 간 의료서비스 격차 해소 - 중앙·권역별 감염병 전문병원 설치 등으로 제2의 메르스 사태 방지	○	○			
46. 시민이 안심하고 사는 주거환경 조성					
- 장기 공적임대주택 확대 공급 - 저소득 고령자 포함 주거취약계층 주거지원 강화	○				
47. 청년과 신혼부부 주거 부담 경감					
- 신혼부부 공공임대주택 지원 확대 -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청년층에 대한 주거지원 강화	○				

자료: 「국정기획자문위원회」(2017: 74-79)의 재구성

국정전략 ‘국가가 책임지는 보육과 교육’은 7개의 국정과제로 구성되어 있다. 공익과 관련하여서는 ‘공동체 이익’(예: 학대/입양/요보호 아동 지원강화, 사회취약계층 교육지원 강화 등)과 ‘일반 이익’(예: 학생중심 교과과정 개편 등으로 학생성장 지원, 다양한 활동 지원으로 청소년 역량 강화 등), 그리고 관리와 관련하여서는 ‘통치’(예: 저출산 대책 추진 컨트롤 타워 기능 강화)와 ‘협치’(예: 부처 간, 지자체-교육청 간 협력을 통한 온종일 돌봄체계 모델 개발·확산, 대학-공공기관-지자체 연계 산학협력 클러스트 조성 등) 관련 국정과제로 구성되어 있다.

〈표 12〉 국가가 책임지는 보육과 교육 관련 국정과제

국가가 책임지는 보육과 교육	공공관리				
	공익		관리		
	공동체	일반	법치	통치	협치
48. 미래세대 투자를 통한 저출산 극복	○			○	
- 보호·양육 지원, 일-가정 양립 지원, 학대/입양/요보호 아동 지원 강화 - 강력한 저출산 대책 추진을 위한 컨트롤 타워 기능 강화					
49. 유아에서 대학까지 교육의 공공성 강화	○	○			○
- 유아교육 국가책임 확대/유치원과 어린이집 격차 완화 - 부처 간, 지자체-교육청 간 협력을 통해 학교 안·밖 온종일 돌봄체계 모델 개발·확산 - 고등 무상교육 포함, 고등교육 기회 균등 제공					
50. 교실 혁명을 통한 공교육 혁신		○			
- 학생중심 교육과정 개편/진로맞춤형 고교체계 개편 등을 통해 학생 성장 지원 - 자유학기제 확대, 대입전형 간소화 등을 통해 공교육 혁신 도모					
51. 교육의 희망사다리 복원	○				
- 사회적 배려 대상자, 사회취약계층에 대한 교육지원 강화 - 학력·학벌 차별 관행 철폐 및 고졸 취업 지원 확대					
52. 고등교육의 질 제고 및 평생·직업교육 혁신		○			○
- 지자체와의 연계 등을 통한 거점국립대, 지역강소대학 육성 등 대학의 공공성·경쟁력 강화 - 국가 직업교육 책임 강화 및 성인평생학습 활성화 - 대학-공공기관-지자체 연계 산학협력 클러스트 조성					
53. 아동-청소년의 안전하고 건강한 성장 지원	○	○			
- 학교 밖 청소년, 가출청소년, 시설퇴소 아동에 대한 맞춤형 지원 강화 - 국제교류, 체험활동 등 다양한 활동 지원으로 청소년 역량 강화					
54. 미래 교육 환경 조성 및 안전한 학교 구현		○			
- 4차 산업혁명에 대비한 창의·융합형 인재 육성 - '22년 OECD 평균수준의 교수-학습 여건 및 안전한 교육 환경 조성					

자료: 「국정기획자문위원회」(2017: 81-87)의 재구성

국정전략 ‘국민 안전과 생명을 지키는 안심 사회’는 8개의 국정과제로 구성되어 있다. 공익과 관련하여서는 ‘공동체 이익’(예: 취약계층 배려 중심 교통정책 추진, 독도-울릉도 관리체계 확립 등을 통한 해양 영토 수호 등)과 ‘일반 이익’(예: 각종 재난 등으로부터 국민 생명 보호 강화 추진, 기후변화 리스크를 관리하고 피해를 최소화하는 안

전 사회 구현 등), 관리와 관련하여서는 ‘법치’ (예: 중국어선 불법조업 근절)와 ‘통치’ (예: 소방청 독립 및 인력·장비 확충, 이원화된 물관리 통합 등), 그리고 ‘협치’(예: 자치단체·경찰·소방·해경 연계 통합재난관리체계 구축, 공론화를 통해 사용후핵연료정책 재검토) 관련 국정과제로 구성되어 있다.

〈표 13〉 국민 안전과 생명을 지키는 안심 사회 관련 국정과제

국민 안전과 생명을 지키는 안심 사회	공공관리				
	공익		관리		
	공동체	일반	법치	통치	협치
55. 안전사고 예방 및 재난 안전관리의 국가책임체계 구축	○	○			
- 교통사고, 승강기 사고, 지진, 화재 등 각종 재난과 안전사고로부터 국민생명 보호 강화 추진 - 교통약자 보호, 취약계층 배려 중심 교통정책 추진					
56. 통합적 재난관리체계구축 및 현장 즉시대응 역량 강화		○		○	○
- 자치단체·경찰·소방·해경을 유기적으로 연계한 통합재난관리체계 구축 - 소방청 독립 및 인력·장비확충/해경청 독립 및 해경 역할 재정립 - 대국민 재난트라우마 극복 지원 총괄 지원체계 구축					
57. 국민 건강을 지키는 생활안전 강화	○	○			
- 화학물질 유해정보 확보 공개/생활주변 위해·불편 요소 해소 적극 추진 - 먹거리 안전 국가책임제 실시/취약계층 먹거리 복지구현					
58. 미세먼지 걱정 없는 쾌적한 대기환경 조성	○	○			
- 미세먼지 오염수준을 선진국 수준으로 개선 - 노인·어린이 맞춤형 대책 추진 등 민감계층 보호강화					
59. 지속가능한 국토환경 조성		○		○	
- 사람과 동물이 공생하는 국토환경조성 - 4대강 재자연화와 이원화된 물관리 통합					
60. 탈원전 정책으로 안전하고 깨끗한 에너지로 전환		○			○
- 탈원전 로드맵 수립을 통해 원전제로시대로 이행 - 공론화를 통해 사용후핵연료정책 재검토 - 에너지 가격체계 개편 및 분산형 전원(신재생에너지, 집단에너지, 자가발전) 보급 확대					
61. 신기후체제에 대한 건실한 이행체계 구축		○		○	
- 지속가능발전위원회 위상 강화를 통해 기후·대기·에너지 정책 통합성 제고 - 기후변화 리스크를 관리하고 피해를 최소화하는 안전사회 구현					
62. 해양 영토 수호와 해양안전 강화	○	○	○		
- 해양영토 수호를 위한 핵심 인프라 구축 및 중국어선 불법조업 근절 - 연안여객 준공영제 기항지 시설 확충·개선 추진					

자료: 「국정기획자문위원회」(2017: 89-96)의 재구성

국정전략 ‘노동존중·성평등을 포함한 차별 없는 공정사회’는 4개의 국정과제로 구성되어 있다. 공익과 관련하여서는 ‘공동체 이익’(예: 부당해고 등으로부터 노동자 권익 구제 강화, 젠더폭력 방지 국가책임 강화 등), 그리고 관리와 관련하여서는 ‘통치’(예: 대통령 직속 성평등위원회 설치·추진으로 성평등 정책 총괄·조정 기능 강화)와 ‘협치’(예: 노·사·정 사회적 대화를 통한 노사관계 제도 개선, 민관협치를 통해 성평등 문화 정착) 관련 국정과제로 구성되어 있다.

〈표 14〉 노동존중·성평등을 포함한 차별 없는 공정사회 관련 국정과제

노동존중·성평등을 포함한 차별 없는 공정사회	공공관리				
	공익		관리		
	공동체	일반	법치	통치	협치
63. 노동존중 사회실현	○				○
- 노사정 사회적 대화를 통한 노사관계 제도 개선 - 임금체불/부당해고 등으로부터 근로자 권익 구제 강화					
64. 차별없는 좋은 일터 만들기	○				
- 비정규직 남용방지, 처우개선 등을 통해 노동시장 양극화 해소 - 산업안전체계 혁신을 통해 특수고용노동자 등 보호대상 확대,					
65. 다양한 가족의 안정적 삶 지원 및 사회적 차별 해소	○				
- 한부모가족 아동 양육비 지원 - 다문화 가족/취약가족 지원					
66. 실질적 성평등 사회 실현	○				○
- 대통령 직속 성평등위원회 설치·추진으로 성평등 정책 총괄·조정 기능 강화 - 민관협치 등을 통해 성평등 문화 정착 - 젠더폭력 방지 국가책임 강화				○	

자료: 「국정기획자문위원회」(2017: 98-101)의 재구성

국정전략 ‘자유와 창의를 넘치는 문화국가’는 7개의 국정과제로 구성되어 있다. 공익과 관련하여서는 ‘공동체 이익’(예: 지역 간 문화 격차 해소, 근로자의 휴식권 보장 등)과 ‘일반 이익’(국민 누구나 체육을 즐기는 생활체육 환경조성, 국민이 편안하게 관광할 수 있는 여건 조성 등), 그리고 관리와 관련하여서는 ‘법치’(예: 근로 사업장 지도·감독 강화)와 ‘협치’(예: 현장의 정책 결정 참여 확대 등) 관련 국정과제로 구성되어 있다.

〈표 15〉 자유와 창의를 넘치는 문화국가 관련 국정과제

자유와 창의를 넘치는 문화국가	공공관리				
	공익		관리		
	공동체	일반	법치	통치	협치
67. 지역과 일상에서 문화를 누리는 생활문화 시대	○	○			
- 생활문화 정책추진을 통해 국민의 문화기본권 확보 - 지역 간 문화격차 해소 및 문화유산 보존·활용 강화					
68. 창작환경 개선과 복지강화로 예술인의 창작권 보장	○				○
- 사각지대에 있는 예술인의 창작 여건 개선 - 현장의 정책결정 참여확대 및 문화융부즈만 제도 도입					
69. 공정한 문화산업 생태계 조성 및 세계 속 한류 확산	○	○			
- 콘텐츠 주요 구성원 간 불공정 거래 개선 - 융복합 콘텐츠 육성·지원/문화 콘텐츠 수출시장 확대					
70. 미디어의 건강한 발전	○	○			
- 전 국민 맞춤형 미디어교육 실시 및 장애인의 방송 접근권 제고 - 방송사-외주사 등 방송시장 상생협력 방안 및 지역방송 활성화 방안 마련					
71. 휴식 있는 삶을 위한 일·생활의 균형 발전	○		○		
- 법정 근로시간 준수 및 근로시간 단축 추진 - 근로사업장 지도·감독 강화 - 근로자의 휴식권 보장, 육아·돌봄 지원 확대					
72. 모든 국민이 스포츠를 즐기는 활기찬 나라	○	○			
- 국민 누구나 체육을 즐기는 생활체육 환경 조성 - 2018 평창동계올림픽·페럴림픽의 성공적 개최로 국격제고					
73. 관광복지 확대와 관광산업 활성화	○	○			
- 국민이 자유롭게 휴가를 쓰고 내외국인이 편안하게 관광 할 수 있는 여건 조성 - 융복합·고부가 관광산업 육성 - 지역 특화 관광명소 육성 등을 통해 지역경제 활성화					

자료: 「국정기획자문위원회」(2017: 103-109)의 재구성

5) 문재인 정부 국정과제 IV: 고르게 발전하는 지역

문재인 정부 5대 국정 목표 중 네 번째 국정 목표인 “고르게 발전하는 지역”은 3개의 국정전략 즉, ‘풀뿌리 민주주의를 실현하는 자치분권’, ‘골고루 잘사는 균형발전’, ‘사람이 돌아오는 농산어촌’으로 구성되어 있다.

국정전략 ‘풀뿌리 민주주의를 실현하는 자치분권’은 4개의 국정과제로 구성되어 있다. 공익과 관련하여서는 ‘공동체 이익’(예: 이전재원 조정 등으로 재정격차 완화 및

균형발전 추진, 행자부 등 추가 이전으로 세종시를 행정중심도시로 육성)과 ‘일반 이익’(예: 역사 교과서 폐지 등으로 교육현장의 자율성 등 강화), 관리와 관련하여서는 ‘법치’(예: 사학비리 근절)와 ‘통치’(예: 국세-지방세 구조개선으로 지방재정의 자율성 제고, 분권과제 및 지방이양사무 발굴·이양 등), 그리고 ‘협치’(예: 중앙-지방 간 정례 협의체 신설, 주민참여 예산제 확대 등)⁸⁾ 관련 국정과제로 구성되어 있다.

〈표 16〉 풀뿌리 민주주의를 실현하는 자치분권 관련 국정과제

풀뿌리 민주주의를 실현하는 자치분권	공공관리				
	공익		관리		
	공동체	일반	법치	통치	협치
74. 획기적인 자치분권 추진과 주민 참여의 실질화					
- 중앙-지방 간 정례 협의체 신설/중앙권한의 지방이양 - 주민발의·소환·투표 등 주민 직접 참여제도 활성화				○	○
75. 지방재정 자립을 위한 강력한 재정분권					
- 국세-지방세 구조개선으로 지방재정의 자율성 제고 - 이전재원 조정 등으로 지자체 간 재정격차 완화 및 균형발전 추진 - 지자체 핵심사업 등으로의 주민참여예산제 확대	○			○	○
76. 교육 민주주의 회복 및 교육자치 강화					
- 역사교과서 국정화 폐지, 사학비리 근절 등으로 교육현장의 자율성·채무성 강화 - 고등·평생·직업교육 중심으로 교육부 조직개편/초·중등 교육 이양 확대를 위한 공동협의체(시도교육청 등) 구성 - 찾아가는 정책설명회 등 현장소통 기회 확산		○	○	○	○
77. 세종특별자치시 및 제주특별자치도 분권모델의 완성					
- (세종특별자치시)행자부·미래부 등 추가이전으로 세종시를 행정중심도시로 육성 - (제주특별자치도) 분권과제 및 지방이양사무 발굴·이양	○			○	

자료: 「국정기획자문위원회」(2017: 111-114)의 재구성

국정전략 ‘골고루 잘사는 균형발전’은 3개의 국정과제로 구성되어 있다. 공익과 관련하여서는 ‘공동체 이익’(예: 혁신도시 육성 등을 통해 지역경제의 활력 제고, 도심과 노후 주거지 생활 여건 개선으로 주민 삶의 질 개선)과 ‘일반 이익’(예: 친환경 선박의

8) 중앙권한의 지방이양, 지방재정의 자율성 제고 등을 포함한 국정과제 74, 75, 77은 자치분권과 관련하여 전문성에 기반한 지방정부에로의 권한이양 및 권한 행사와 관련한 지방정부의 자율성 강화를 이야기하고 있다는 측면에서 본 연구는 관련 과제들을 ‘통치’를 내재화한 국정과제들로 이해하였다.

건조기술 개발 등을 통한 조선산업 경쟁력 제고 등), 그리고 관리와 관련하여서는 ‘통치’(예: 국가균형발전위원회 위상 강화를 통해 강력한 균형발전 지원체계 구축, 해운선사에 대한 원스톱지원체계구축)와 ‘협치’(예: 부처 협업 TFT 등을 통한 도시재생뉴딜사업 발굴·지원) 관련 국정과제로 구성되어 있다.

〈표 17〉 골고루 잘사는 균형발전 관련 국정과제

골고루 잘사는 균형발전	공공관리				
	공익		관리		
	공동체	일반	법치	통치	협치
78. 전 지역이 고르게 잘사는 국가균형발전					
- 국가균형발전위원회 위상 강화를 통해 강력한 균형발전 지원체계 구축 - 혁신도시 육성 등을 통해 지역경제의 활력 제고	○			○	
79. 도시경쟁력 강화 및 삶의 질 개선을 위한 도시재생 뉴딜 추진					
- 도심과 노후 주거지 생활 여건 개선으로 주민 삶의 질 개선 - 도시재생 연계 공공임대주택 공급/주거취약계층 녹색건축물 우선 적용 - 부처 협업 TFT 등을 통한 도시재생뉴딜사업 발굴·지원	○				○
80. 해운·조성 상생을 통한 해운강국 건설					
- 해운선사에 대한 원스톱지원체계 구축 및 해외 물류망 확장 - 친환경 선박의 건조기술 개발과 대체 보조금 지급 등을 통한 조선산업 경쟁력 제고		○		○	

자료: 「국정기획자문위원회」(2017: 116-118)의 재구성

국정전략 ‘사람이 돌아오는 농산어촌’은 4개의 국정과제로 구성되어 있다. 공익과 관련하여서는 ‘공동체 이익’(예: 농산어촌 생활 인프라 확충, 영농창업 초기 생활안정·정착지원 강화 등)과 ‘일반 이익’(예: 농산어촌 부존자원 활용 국민 휴식공간 조성, 품질좋은 먹거리 공급 등), 그리고 관리와 관련하여서는 ‘통치’(예: 해양공간 통합관리 및 해양관리 국가관리체계 강화)와 ‘협치’(예: 농어촌 특별위원회 등 협치·참여 행정 확산) 관련 국정과제로 구성되어 있다.

〈표 18〉 사람이 돌아오는 농산어촌 관련 국정과제

사람이 돌아오는 농산어촌	공공관리				
	공익		관리		
	공동체	일반	법치	통치	협치
81. 누구나 살고 싶은 복지 농산어촌 조성	○	○			
- 교통·의료 등 농산어촌 생활 인프라 확충 - 농산어촌 부존자원 활용 일자리 창출 및 국민 휴식공간 조성					
82. 농어업인 소득안전망의 촘촘한 확충	○				
- 소득보전 직불제를 공익형 직불제로 확대·개편하여 농어가 소득 안정 도모 - 농산물 수급안정, 농어업 재해대응 강화로 농어가 소득 및 경영위험 완화					
83. 지속가능한 농식품 산업기반 조성	○	○			○
- 영농창업 초기 생활안정·정착지원 강화 - 환경친화적/스마트한 농식품확산 및 품질좋은 먹거리 공급 - 농어업/농어촌 특별위원회, 농어업회의소 등 협치·참여 행정 확산					
84. 깨끗한 바다, 풍요로운 어장		○		○	
- 수산자원 관리 강화/해양 생태계기반 수산정책 실현 - 해양공간 통합관리 및 해양환경 국가관리체계 강화					

자료: 「국정기획자문위원회」(2017: 120-123)의 재구성

6) 문재인 정부 국정과제 V: 평화와 번영의 한반도

문재인 정부 5대 국정 목표 중 다섯 번째 국정 목표인 “평화와 번영의 한반도”는 3개의 국정전략 즉, ‘강한 안보와 책임 국방’, ‘남북 간 화해협력과 한반도 비핵화’, ‘국제협력을 주도하는 당당한 외교’로 구성되어 있다.

국정전략 ‘강한 안보와 책임 국방’은 5개의 국정과제로 구성되어 있다. 공익과 관련하여서는 ‘공동체 이익’(예: 군사시설 이전사업 지원 등을 통해 주민불편 해소, 직업군인 및 의무복무자에 대한 복무여건 개선 및 인권보장 강화 등)과 ‘일반 이익’(예: 미래지향적 국방개혁 추진을 통해 책임 국방구현, 방위산업 육성을 통해 일자리를 창출하고 경제적·산업적 부가가치 창출 등), 관리와 관련하여서는 ‘법치’(예: 방위산업 비리에 대한 처벌 및 예방시스템 강화, 상시 모니터링·검증체계 강화를 통해 병역면탈 예방 및 근절 등)와 ‘통치’(예: 국방 예산·조직·인사 전반의 구조조정 절감을 통해 지출성과 극대화, 국방획득체계 전반의 업무수행에 대한 전문성, 효율성 강화방안 모색 등), 그리고 ‘협치’(예: 국세청 등 유관기관과의 협조를 통한 사회관심 계층 병역 집중

관리) 관련 국정과제로 구성되어 있다.

〈표 19〉 강한 안보와 책임국방 관련 국정과제

강한 안보와 책임 국방	공공관리				
	공익		관리		
	공동체	일반	법치	통치	협치
85. 북핵 등 비대칭 위협 대응능력 강화					
- 국방예산·조직·인사 전반의 구조조정·절감을 통해 지출 성과 극대화 - 북핵 대응 ‘한국형 3축체계’ 조기 구축 및 전담조직(전략사령부) 설치 검토 - 국가안보실 중심의 사이버안보 컨트롤 타워 강화		○		○	
86. 굳건한 한·미동맹 기반 위에 전작권 조기 전환					
- 전작권 전환조건 재검토 및 준비성 - 한국군의 연합방위 주도 능력 조기확보 등을 통해 책임국방 실현		○		○	
87. 국방개혁 및 국방 문화의 강력한 추진					
- 미래지향적 국방개혁 추진을 통해 책임국방 구현 - 국방 문화 및 군 사법 개혁을 통한 국방체질 개선 및 장병인권 보호 - 군공항 및 군사시설 이전 사업 지원을 통해 국방력 강화 및 주민 불편 해소	○	○	○		
88. 방산비리 척결과 4차 산업혁명 시대에 걸맞는 방위산업 육성					
- 방위산업 비리에 대한 처벌 및 예방시스템 강화 - 국방획득체계 전반의 업무수행에 대한 전문성, 효율성 강화 방안 모색 - 미래 방위산업 육성을 통해 양질의 일자리를 창출하고 경제·산업적 부가가치 창출		○	○	○	
89. 장병 인권 보장 및 복무 여건의 획기적 개선					
- 직업군인 및 의무복무자에 대한 복무여건 개선 및 인권보장 강화 - 국세청 등 유관기관과의 협조를 통한 사회관심 계층 병적 집중관리 및 상시 모니터링·검증체계 강화를 통해 병역면탈 예방 및 근절	○		○		○

자료: 「국정기획자문위원회」(2017: 125-129)의 재구성

국정전략 ‘남북 간 화해협력과 비핵화’는 6개의 국정과제로 구성되어 있다. 공익과 관련하여서는 ‘공동체 이익’(예: 남북 간 하나의 시장 지향/남북 접경지역 발전 방안 마련, 이산가족 분단 고통 해소 등을 통한 민족공동체 회복 등)과 ‘일반 이익’(예: 남북 경험 활성화로 고용창출과 경제성장을 제고, 북핵 비핵화 진전을 통해 한반도 평화정

착 실현), 그리고 관리와 관련하여서는 ‘협치’(예: 국회협의·국민소통 기반 통일국민협약 체결·추진, 범국민 통일교육 거버넌스 구축·운영으로 통일교육의 주요 원칙에 대한 사회적 합의 도출 등) 관련 국정과제로 구성되어 있다.

〈표 20〉 남북 간 화해협력과 한반도 비핵화 관련 국정과제

남북 간 화해협력과 한반도 비핵화	공공관리				
	공익		관리		
	공동체	일반	법치	통치	협치
90. 한반도 신경제지도 구상 및 경제통일 구현					
- 남북경협활성화로 통일여건 조성 및 고용창출과 경제성장을 제고 - 민·관 협력 네트워크를 통해 남북한 하나의 시장을 지향하고, 남북접경지역 발전 방안 마련	○	○			○
91. 남북기본합정 체결 및 남북관계 재정립					
- 남북대화를 통해 남북 간 현안해결, 남북대화 정례화 - 남북기본합정 체결로 남북관계 발전과 한반도 평화정착	○	○			
92. 북한 인권개선과 이산가족 등 인도적 문제 해결					
- 북한주민 인권상황 실질적 개선 및 이산가족 등의 분단 고통 해소 등을 통한 민족공동체 회복 - 탈북민의 자활·자립 능력 향상과 지역사회 통합 실현	○				
93. 남북교류 활성화를 통한 남북관계 발전					
- 다양한 분야의 사회문화 교류협력 확대 및 제도화 - 남북교류협력법 정비 등 제도 개선을 통해 교류협력의 안정적 기반 확충	○				
94. 통일 공감대 확산과 통일 국민협약 추진					
- 국회협의·국민소통 기반 통일국민협약 체결·추진 - 범국민 통일교육 거버넌스 구축·운영으로 통일교육의 주요 원칙에 대한 사회적 합의 도출	○				○
95. 북핵문제의 평화적 해결 및 평화체제 구축					
- 북핵 비핵화에 진전을 통해 한반도 평화정착 실현 - 평화로운 한반도 구현을 통해 평화통일 토대 마련	○	○			

자료: 「국정기획자문위원회」(2017: 131-136)의 재구성

국정전략 ‘국제협력을 주도하는 당당한 외교’는 5개의 국정과제로 구성되어 있다. 공익과 관련하여서는 ‘공동체 이익’(예: 주변 4국 협력외교 강화, 신흥경제권 국가와의 협력 확대 등)과 ‘일반 이익’(예: 민간·공공부문 일자리 창출에 기여하는 개발협력, 보호무역주의 확산을 저지하고 신흥시장 적극 개척 등), 그리고 관리와 관련하여서는 ‘통치’(예: 체계적·통합적·효율적 개발협력 체계 추진 강화, 통상정책 총괄·조정 기능

을 강화하고 통상 전문성 제고)와 ‘협치’ (예: 외교정책에 대한 대국민 소통 및 참여 강화, 국민 참여형 공공외교 강화) 관련 국정과제로 구성되어 있다.

〈표 21〉 국제협력을 주도하는 당당한 외교 관련 국정과제

국제협력을 주도하는 당당한 외교	공공관리				
	공익		관리		
	공동체	일반	법치	통치	협치
96. 국민외교 및 공공외교를 통한 국익 증진	○				○
- 외교정책에 대한 대국민 소통 및 참여 강화 - 국민 참여형 공공외교 강화를 통한 우호적 외교환경 조성 및 대외 이미지 제고					
97. 주변 4국과의 당당한 협력 외교 추진	○	○			
- 신뢰와 협력을 바탕으로 한 한·미 간 동맹, 한·중간 신뢰 회복, 미래지향적 협력 동반자 관계로서 한·일 관계, 한·러 전략적 협력 도모 - 주변 4국 협력외교 강화로 한반도 평화 안정에 기여					
98. 동북아 플러스 책임공동체 형성	○				
- 동북아 주요국간 다자협력 제도화 도모, 아세안 및 인도와의 관계 격상을 통해 평화·번영 공간 확대 - 한반도·유라시아 지역 연계성 증진					
99. 국익을 증진하는 경제외교 및 개발협력 강화	○	○		○	
- 신흥경제권 국가와의 협력 확대 등을 통한 국익제고 - 민간·공공부문 일자리 창출에 기여하는 개발협력 - 체계적·통합적·효율적 개발 협력 체계 추진 강화					
100. 보호무역주의 대응 및 전략적 경제협력 강화	○	○		○	
- 대미·대중 통상 현안의 안정적 관리 및 호혜적 경제협력 확대 - 보호무역주의 확산을 저지하고 신흥시장 적극 개척 - 통상정책 총괄·조정 기능을 강화하고 통상 전문성 제고					

자료: 「국정기획자문위원회」(2017: 138-142)의 재구성

IV. 결 론

본 연구는 행정 즉, 공공관리의 관점에서 문재인 정부 100대 국정과제를 살펴본 연구이다. 분석 결과 공익 중 ‘공동체 이익’ 관련 국정과제가 71개, ‘일반 이익’ 관련 국정과제가 61개로 ‘일반 이익’보다는 ‘공동체 이익’과 관련된 국정과제가 많았던 것으로 조사되었다. 관리의 경우는 ‘법치’ 관련 국정과제가 20개, ‘통치’ 관련 국정과제가

26개, ‘협치’ 관련 국정과제가 30개로 ‘법치’보다는 ‘통치’와 ‘협치’ 관련 국정과제가 많았던 것으로 조사되었다. 분석 결과에 바탕 할 때 문재인 정부는 ‘일반 이익’ 창출보다는 ‘공동체 이익’ 창출에 초점을 두고 ‘법치’보다는 ‘통치’와 ‘협치’를 중시한 정부로서 ‘통치’와 ‘협치’를 통한 ‘공동체 이익’ 창출에 보다 중점을 둔 정부였다고 할 수 있겠다.

〈표 22〉 행정(공공관리)의 관점에서 살펴본 문재인 정부 국정과제

국정목표	공공관리				
	공익		관리		
	공동체	일반	법치	통치	협치
국민이 주인인 정부	10	5	8	3	8
더불어 잘사는 경제	17	19	6	6	5
내 삶을 책임지는 국가	24	22	2	5	8
고르게 발전하는 지역	7	5	1	7	5
평화와 번영의 한반도	13	10	3	5	4
합계	71	61	20	26	30

본 연구는 국정과제의 국정은 국가관리이고 국가관리는 행정 즉, 공공관리인데 국정과제를 행정(공공관리)의 관점에서 살펴본 연구가 없다는 문제의식에서 출발한 연구이다. 분석을 위해서는 분석 틀이 필요했다. 이에 본 연구는 행정(공공관리)의 관점에서 국정과제를 살펴볼 수 있는 국정과제 분석 틀을 설정하고, 분석 틀에 근거하여 지금의 이재명 정부와 그 맥을 같이 한다고 보여지는 문재인 정부의 국정과제를 분석하여 그 결과를 제시하였다.

본 연구의 연구 결과와 관련하여 다음과 같은 질문들이 제기될 수 있다. 이를테면 본 연구는 공공성과 관련하여 공익을 이른바 ‘공동체 이익’과 ‘일반 이익’으로 구분하여 제시하고 있는데 공익에 대한 기존 논의와 연계하여 공익에 대한 논의를 보다 체계적으로 제시할 필요가 있지 않나? 본 연구는 행정(공공관리)의 개념을 설명하면서 전통행정론(PA), 신공공관리론(NPM), 뉴거버넌스(New Governance)를 이른바 공공관리의 ‘관리 패러다임’으로 이야기하고 있는데 공공관리의 ‘관리’ 뿐 아니라 공공관리의 ‘공공성’에 대한 논의도 포함하는 ‘공공관리 패러다임’으로 보는 것이 더 타당하지 않겠는가? 공공관리의 관리방식을 이른바 ‘법치’, ‘통치’, ‘협치’로 대별하고 있는데 용어 선택이 적당한가? ‘법치’, ‘협치’를 ‘통치’와 병치시키고 있는데 ‘법치’와 ‘협치’를 ‘통

치'의 한 방식으로 볼 수도 있지 않나? 문재인 정부 국정과제에 대한 나름의 분석 결과를 제시하고 있는데 국정과제 분석이 다소 자의적이지 않나? 분석 틀 적용기준을 보다 명확히 하고 분석의 객관성을 담보할 필요가 있지 않나? 분석 결과를 보면 '공동체 이익'과 '일반 이익' 모두에 관련된 국정과제, 그리고 '법치', '통치', '협치' 중 어느 둘 내지 셋 모두에 관련된 국정과제가 상당수인데 이러한 분석 결과는 국정과제의 특징을 살펴보는데 있어 어떤 함의를 가질 수 있겠는가? 분석 결과를 보면 서로 다른 관리방식이라고도 할 수 있는 '통치'와 '협치' 관련 국정과제의 수에 큰 차이가 없었던 것으로 분석되고 있는데 이와 같은 분석 결과는 국정과제의 특징을 분석하는데 있어 또한 어떤 함의를 가질 수 있겠는가? 본 연구는 특정 정부의 국정과제에 대한 분석인데 역대 정부의 정부 과제를 비교·분석함이 보다 더 풍부한 연구결과를 제시하지 않겠는가?

본 연구는 국정과제 분석에 대한 시론적(試論的) 연구이다. 상기 적시의 연구 문제들을 염두해 두고 이에 대한 답을 찾기 위한 연구는 아니었다. 본 연구는 이에 대한 답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 본 연구의 한계이다. 그러나 상기 적시의 연구 문제들은 본 연구의 연구 결과에 바탕 할 때 제기될 수 있는 연구 문제들이다. 나름의 답을 필요로 하는 새로운 연구 문제들을 제기하고 있다는 점에서는 본 연구의 한계가 곧 본 연구의 의의이기도 하다. 공공관리로서의 행정에 대한 개념적 논의의 정치성, 분석 틀의 정밀성 및 분석기준 및 이의 적용에의 엄밀성, 객관성 등을 담보하여 문재인 정부뿐 아니라 윤석열 정부를 포함한 역대 정부의 국정과제를 비교 분석하여 분석 결과에 대한 이론적·실천적 함의를 풍부하게 제시하는 것이 본 연구에 이은 향후 연구과제가 될 것임을 끝으로 밝혀 둔다.

참고문헌

- 고봉진.(2023). 功利와 公利. 「법철학연구」, 26(2): 53-84.
- 국정기획자문위원회.(2017). 「문재인정부 국정운영 5개년 계획」.
- 김미경.(2020). 우리나라 역대 정부별 정부혁신 흐름과 특성 분석. 「한국인사행정학회보」, 19(1): 117-139.
- 김판석·홍길표.(2011). 정부혁신을 둘러싼 쟁점과 새로운 발전방향 모색: 참여정부 정부혁신의 경험과 주요 이슈를 중심으로. 「한국인사행정학회보」, 10(3): 23-52.
- 남궁근.(2021). 문재인 정부 국정과제의 성과평가 과정과 결과. 「정책분석평가학회보」, 31(2):

1-33.

남재걸·김재일.(2022). 역대정부와 윤석열 정부의 정부혁신 비교 분석. 「한국공공관리학보」, 36.(3): 112-146.

염재호·하민철·길종백.(2008). 노무현 정부의 정부혁신 재평가: 개념적 분석 틀 구성을 중심으로. 「정부학연구」, 14(3): 67-96.

유민봉.(2016). 「한국행정학」. 서울: 박영사.

윤태범.(2024). 정부혁신의 이념과 실제: 역대 정부의 사례 분석. 「한국사회와 행정연구」, 35(2): 1-30.

은재호.(2006). 참여정부 정부혁신의 평가와 과제: 연속성과 비연속성을 중심으로. 「행정논총」, 44(3): 207-247.

이명석.(2002). 거버넌스의 개념화: '사회적 조정'으로서의 거버넌스. 「한국행정학보」, 36(4): 321-338.

이인원·이영미.(2019). 언어 네트워크 분석기법을 활용한 문재인 정부의 가치지향과 정책방향 분석: 100대 국정과제를 중심으로. 「한국행정논집」, 31(4): 643-670.

임도빈.(2000). 신공공관리론과 베버 관료제 이론의 비교. 「행정논총」, 38(1): 51-72.

정정길.(2011). 「행정학의 새로운 이해」. 서울: 대명출판사.

정홍상.(2011). 3C 조직 관리 효과성 모델. 「한국행정논집」, 23(1): 219-244.

황혜신.(2013). 노무현 정부와 이명박 정부의 정부조직개혁 비교분석. 「사회과학연구」, 24(3): 333-360.

네이버 사전 <https://hanja.dict.naver.com/>

Udo Pesch.(2008). "The Publicness of Public Administration," Administration & Society, 40(2): 170-193.

Abstract and Key Words

Analysis of the Moon Jae-in Administration's Policy Tasks from the Perspective of Public Administration

Jeong, Hong-Sang
Kyungpook National University

This study examines the Moon Jae-in administration's policy tasks from the perspective of public administration. It develops a conceptual framework that classifies the publicness of public administration into public interest and public good, and divides the administration of public administration into rule of law, government, and governance. The analysis then evaluates the policy tasks of the Moon Jae-in administration using the framework. The findings show that the Moon Jae-in administration prioritized enhancing public interest over public good, employing strategies through government and governance rather than relying solely on the rule of law.

[Key Words: public interest, public good, rule of law, government , governance]